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18년 대통령예산안 개요 / 3

II. 주요부처별 예산계획 / 6

III. 의회 반응 및 향후 전망 / 8

IV.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10

V. 시사점 / 14

요 약

□ 2018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 개요

○ (개요) 미국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은 **트럼프의** 향후 **국정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청사진의 핵심자료**

– 백악관은'2018년 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3.16)

* 간편본 형식의 부처별 재량예산으로 완성본(의무, 세입·세출계획)은 5월 초 추가 발표

○ **(핵심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미국우선주의와 신보호주의가** 반영된 **안보·경제정책을 숫자로 풀어낸 예산안**으로 평가

※ (주요내용) '강한 국방력,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정책 표방

- 전체 예산 : 1조 650억 달러(국방예산 6,030억 달러, 비국방예산 4,620억 달러)

◇ (증액▲) 국방예산 전년 대비 540억 달러 증액(10% ↑), 안보예산 20억 달러(7% ↑), 미-멕 국경장벽 설치, 불법이민자단속, 마약 등 강력범죄 퇴치

◇ (삭감▼) **국방·안보 제외 전부처 삭감,** 환경청(-31%), 농무부(-21%), 노동부(21%), 국무부(-19%), 상무부(-16%) ;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수입규제에 방점)

□ 대한국 영향력 분석

○ **(통상)** 무역집행 권한 강화로 **반덤핑·상계관세 피소 증가 우려**

– 상무부 예산은 축소되었으나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무역집행 권한은 강화**

* 국제무역청의 수출 진흥 기능은 축소하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 기능은 확대한다는 계획

○ **(인프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가시화, 건설기자재 수요 급등** 전망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인프라 **3.5년 동안 최소 216억 달러 소요** 전망

– 우려했던 바와 달리 국경장벽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 법이 미적용, 관련 **건축 자재 및 기계 중장비 조달**에 우리나라 기업 참여 가능

* 바이 아메리칸 법: 정부조달 시 미국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의료·제약)** 국내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약품 도입 확대**

– 미국 식약청이 바이오복제약 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전망

○ **(IT) 규제완화 및 보안 관련 수요 증가**로 연방정부 IT 시장 확대 전망

– 트럼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 IT 시장 확대 전망

– 다만, 기술혁신을 철저히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축소를 예정**하고 있어 **중소 기술기업의 기술혁신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

○ **(환경)** 친환경 지원 연방 프로그램 축소, **전기 자동차 개발 지원 중단**

– 자동차 연료 효율화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속품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통상압력) 미국 우선주의, 하드파워 예산안 대한 통상압력 강화 우려**

– 전임정부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폐기하고 국방력을 앞세운 하드파워 기조의 대외 정책 강력 시사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분담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 **(산업영향) 트럼프 예산 산업간 명암 극명하게 반영 예정**

– 대통령 예산(1조 6백억 달러)은 정부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산업에 직간접적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수혜산업)** 군수·자동차·사이버보안·전통에너지·바이오·인프라

* **(피해산업)**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브랜드제약

○ **(의회통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반대에 직면, 관철여부 불투명**

–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예산안이 부유층의 부담을 중산층으로 전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계획이라고 일축하며 부정적**

– 공화당은 트럼프의 예산안에 찬성하나, 일부 **의원들은 국무부 예산 삭감과 특정 지방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폐기 등에 대해 우려 표명**

* 현 예산관리법은 국방예산의 증가 및 비국방 예산의 삭감조치 미허용(상원 60% 동의要)

Ⅰ 2018년 대통령예산안 개요

1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개요

□ [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신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 제시

○ 현지 시간 3월 16일,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처(OMB)는『America First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1]*』**이라는 제목의 2018 **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President's Budget Request)**을 의회에 제출함.**

– **미국 연방 예산 편성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대통령) 예산안은 의회 예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로는 법률 효력이 없음.**

* 미국의 연방 예산 편성은 상·하원 의결을 통해 법률의 형태로 회계연도 시작(10.1) 이전까지 통과되어야 함. 그러나 법정 예산 일정(표1 참고)보다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

○ 그럼에도 **대통령예산안은 대통령(특히 신임 대통령의 경우) 국정 철학과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중요하게 해석됨.

○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예산안은 간편본*으로 부처별 재량예산[2]만을 다루었으며, 완성본(의무예산, 세입세출계획 등 포함)은 5월 초에 추가 발표** 예정

* 통상 신임대통령 예산안은 법정 기한(2월 초)을 한두 달 가량 넘겨 간편 본의 형태로 우선 제출된 후 4월 초, 5월 중순경에 완성본으로 보완됨.

[표1] 미국 연방의회 예산 결정 일정

기 한	활 동
2월 첫째 월요일	대통령예산안 제출
2월 15일	의회예산국(CBO)은 대통령예산안 재추계 후 의회 보고
예산안 접수 후 6주 내	상·하원 위원회별 소견과 추계를 예산위원회에 제출
4월 15일	상·하원 합동예산결의안 채택
5월 15일	하원의 세출법안 심의 개시
6월 10일	하원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 심의 완료
6월 15일	상·하원 조정법안(Reconciliation) 통과
6월 30일	의회 세출입법 완료 및 대통령에게 전달
9월 30일	대통령 서명으로 세출법 효력발생

[자료원] budget.house.gov (Congressional Budget Act 1974)

1)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 재량예산(Discretionary Spending)은 부처가 재량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복지, 국가채무이자 등 고정지출인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구분됨.

□ [기조] 국방 · 안보 ·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충실

○ 이번 대통령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숫자로 풀어냈다고 평가받을 만큼 대선 후보 시 공약을 고스란히 반영**함.

– 핵심 대선공약인 ▲ 국방 강화 ▲ 불법이민자 단속 ▲ 마약 등 강력 범죄 퇴치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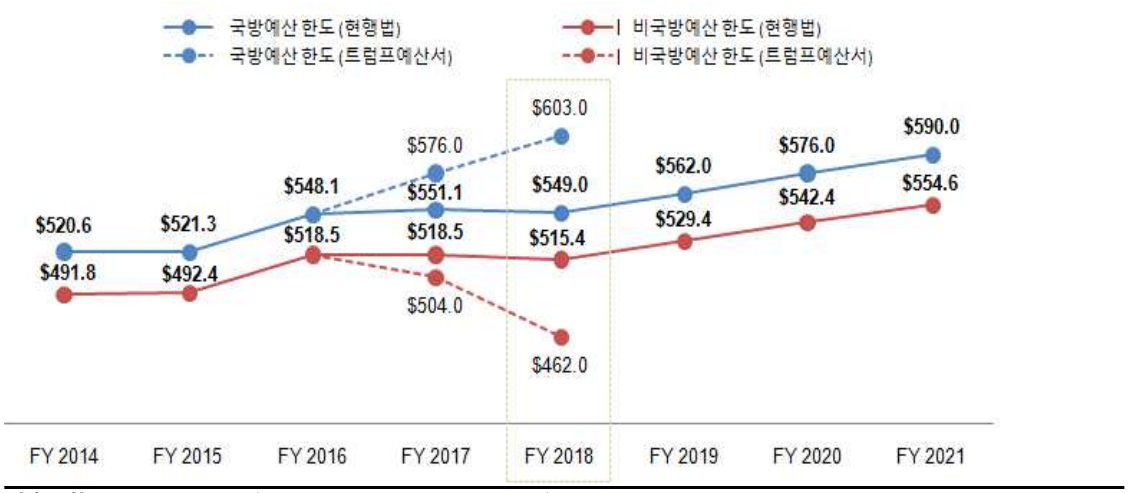
○ **국방예산은 540억 달러 증액**(전년 대비 10%)하는 **반면 非국방예산은 비례하여 삭감**함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안** 제시

–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 **강력한 국방력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 균형 있는 국가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표방**

○ 그러나 2011년 통과된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 2011)에서 규정한 **연방예산 상한제도(spending cap)에 따라 의회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

–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국방예산의 법정 예산 상한액(5,490억 달러)을 넘어서는 6,0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음. (그림1 참고)

[그림1] 미국 연방 재량지출 상한선 단위 : 미화 십억 달러



[자료원] Bloomberg Gov.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FY2018 Budget Blue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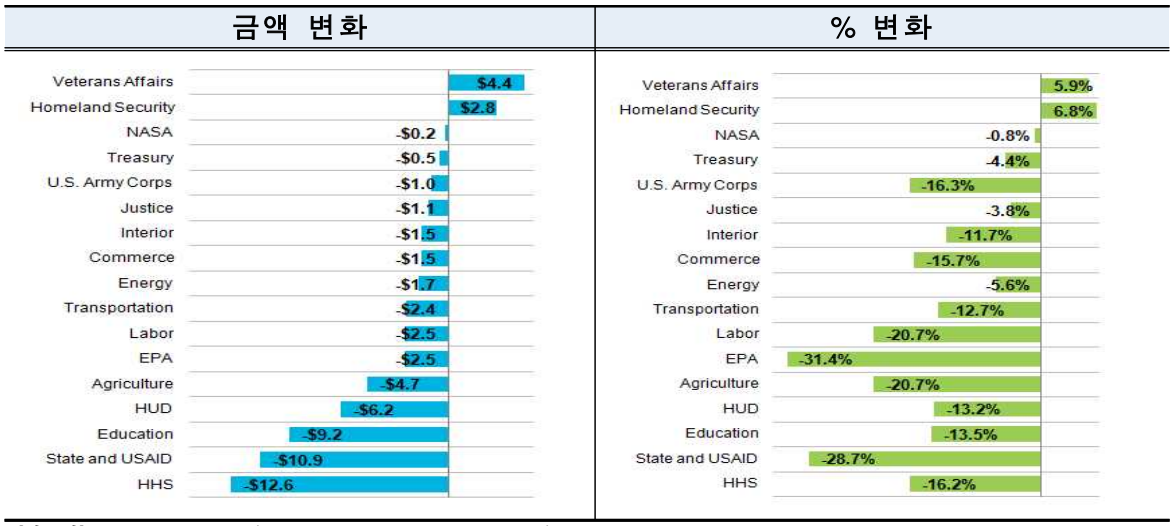
□ [부처] 환경청, 보건부, 국무부 등 예산 대폭삭감, 80여개 프로그램 폐기

○ **국방·안보 관련(국방부, 국토안보부, 보훈부)을 제외한 모든 연방 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함. 15% 이상 예산 삭감이 요청된 부처가 7개에 달함.

– 전년 대비 환경청(−31.4%), 국무부(−18.7%), 농무부(−20.7%), 노동부(−20.7%), 보건복지부(−16.2%) 등의 예산 감축이 가장 두드러짐. (그림2 참고)

[그림2] 비국방 재량지출 예산 증감 현황 (2017년 대비)

단위 : 미화 십억 달러



[자료원] Bloomberg Gov.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FY2018 Budget Blueprint

○ 친환경 펀드, 제조업 육성, 해외원조, R&D 및 교육지원 등과 관련한 **전임 정부의 대표 사업 폐기로 본격적인 '오바마 지우기'에 돌입**

– 해외개발원조, 지역개발, 예술, 저소득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19개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y)에 대한 예산 투입 중단

[표2] 2018년 대통령예산안 상에 예산투입이 중단되는 기관

구 분	기관명	역 할
해외 개발/원조	Oversea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미국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 지원
	U.S. Trade & Development Agency	개발도상국 대상 미국기업 수출 보증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아프리카 지역 개발지원
	Inter-American Foundation	중남미 지역 개발지원
	U.S. Institute of Peace	국제평화 유지 지원 원조
지역개발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아팔란치아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충
	Delta Regional Authority	미시시피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충
	Denali Commission	알래스카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Northern Border Regional Commission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지원	Legal Services Corporation	소외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	저개발지역 개발 및 저소득 주택 보급
	U.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력증진
	Corp.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비영리자원봉사 단체 활동 지원
환경	Chemical Safety Board	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문화·예술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박물관 또는 도서관 보급 지원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1,500여 개의 공영방송국 금융지원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비영리 예술단체 금융지원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교육과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금융지원
기타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국제관계 전문 민간연구소

[자료원] Bloomberg Gov.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FY2018 Budget Blueprint

Ⅱ 주요 부처별 예산계획

국방부 (Dept. of Defense)

전년대비 + 10% (520억 달러)	< 2017년 예산 > 5,870억 달러	< 2018년 계획 > 6,390억 달러

- ⬆ 육군과 해병대 전력 보강 및 병력 증원
- ⬆ 해군 전함 편대 확대 보강
- ⬆ F-35 차세대 전투기 조기 구매로 공군 전력 확대
- ⬆ ISIS 퇴치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국토안보부 (Dept. of Homeland Security)

전년대비 + 7% (28억 달러)	< 2017년 예산 > 413억 달러	< 2018년 계획 > 441억 달러

- ⬆ 국경수비 및 이민관리 집행 예산 확대(국경수비대, 이민관리국 증원)
- ⬆ 멕시코 국경 장벽 설립 예산 신규 편성
- ⬇ 재난 및 대테러 방지를 위한 주·지방정부 교부금(6.7억 달러) 삭감

상무부 (Dept. of Commerce)

전년대비 - 16% (520억 달러)	< 2017년 예산 > 92억 달러	< 2018년 계획 > 78억 달러

- ⬇ 해수면 상승 등 해양 관련 연구 지원 예산 2.5억 달러 삭감
- ⬇ 경제개발청(EDA) (저개발 지역 경제 지원 기관) 예산 폐지
- ⬇ 소수계 인종 비즈니스 개발청(MBDA) 예산 폐지
- ⬇ 제조업 확대 파트너십 프로그램(중소 제조기업 연구개발 지원) 예산 폐지
- ⬇ NOAA 연구지원 프로그램(수자원 관련 대학 연구 지원) 폐지

보건복지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전년대비 - 18% (151억 달러)	< 2017년 예산 > 841억 달러	< 2018년 계획 > 690억 달러

- ⬇ 국립보건원(NIH)의 생명과학 연구지원금 58억 달러 삭감 (전년 대비 18%)
  - * 해외 의료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폐지 등
- ⬆ 마약 중독 치료 및 예방 관련 지원 예산 증액

에너지부 (Dept. of Energy)

전년대비 – 6% (17억 달러)	< 2017년 예산 > 297억 달러	< 2018년 계획 > 280억 달러

- 에너지부 산하 과학연구실(Office of Science) 예산 9억 달러 삭감
- 첨단에너지연구프로젝트(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예산 폐지
- 첨단자동차제조기술(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프로그램 폐지
- 핵발전소 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재가동을 위해 1.2억 달러 배정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전년대비 – 31% (25억 달러)	< 2017년 예산 > 82억 달러	< 2018년 계획 > 57억 달러

- 환경보호청이 운영 중인 50개 프로그램 폐지 및 3,200명 인원 감축
- 국제 환경변화 대처 프로그램 지원 예산 폐지
- 환경보호청 산하 연구개발실(Office of R&D)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
- Energy Star 인증(건물, 소비자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 인증) 지원 폐지
-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주·지방정부 지원프로그램 폐지

교통부 (Dept. of Transportation)

전년대비 – 13% (24억 달러)	< 2017년 예산 > 186억 달러	< 2018년 계획 > 162억 달러

-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항공교통통제 기능을 민영화
- 장거리 기차 이용자를 위한 보조금 및 신규 대중교통 지원 예산 폐지
- 농촌지역 소규모 민간 공항에 대한 보조금 삭감(1.8억 달러)
- TIGER* 프로그램 예산 5억 달러 삭감

* 주·지방정부의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교통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타 부처

- **(항공우주청)** 화성 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그램 축소 또는 폐기
- **(교육부)**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폐지
- **(국무부)** UN그린환경 펀드(저개발국의 대기오염 완화 목적) 지원 폐지
- **(중소기업청)** 경제 저개발 지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폐지

Ⅲ 의회 반응 및 향후 전망

□ [의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반대에 직면, 관철여부 불투명

○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예산안이 부유층의 부담을 중산층으로 전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계획이라고 일축함.**

– 민주당 상원대표 척 슈머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트럼프는 마치 중산층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특정 계층(부유층) 이익의 대변자였다."라고 공격함.

○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은 **"트럼프의 예산안은 국방력 강화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며 총론에서 찬성입장**을 밝힌 반면,

– 상원 지도부를 위시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국무부 예산 삭감과 특정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폐기 관련 심각한 우려 표명**

□ [전망] 예산상한선 제도, 트럼프 예산안 관철의 최대 장애물

○ 2011년 통과된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은 **연방 재정 적자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국방과 非국방 예산의 상한 금액을 지정 (2021년까지)**

– 트럼프는 예산관리법에서 정한 **2018년 국방예산 상한인 5,490억 달러에 10%(540억 달러)를 인상하고 非국방 예산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계획 제시

○ 하지만 트럼프의 계획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률을 통해 예산관리법에서 정한 예산 상한 금액을 올리거나, 상한제 자체를 폐기해야 함.**

– 또한, 예산관리법은 국방예산과 非국방예산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도록 강제함. 즉, 이번 예산안과 같이 **국방예산과 非국방예산 중 한쪽 비목은 늘리고 다른 한쪽은 줄이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예산관리법의 수정을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더불어 상원(전체 100석)에서 재적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는 52석으로 법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참고자료 연방 예산 결정 절차 및 일정

1	대통령예산안 제출 (President's Budget Proposal)	2월 첫째 월요일까지

-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처(OMB)는 모든 개별 행정부처로부터 예산 계획 수렴
- OMB는 경제전망, 세입·세출계획, 부채 추이, 부처별 지출내역, 정책 및 입법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	예산결의서 채택 (Budget Resolution)	4월 15일 기한

- 상·하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는 각각 예산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 합동 예산결의서 채택 (상·하원 이견 발생 시 합동예산위원회에서 조정 후 재표결)
- 예산결의서는 세입·세출 목표, 재정적자 허용 규모, 국가채무 한도 등을 합의함으로써 추후 세출법안과 기타 지출 및 세입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

3	세출법안 통과 (Appropriation Bill)	6월 30일 기한

-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의 12개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별 12개 세출법안을 입안하고 하원 표결을 통해 상원으로 전달. 상원 세출위원회 역시 12개 소위원회를 통해 하원과 동일한 절차로 법안 상정. 12개의 세출법안이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2개 법안을 단일 법안으로 묶는 옴니버스(Omnibus Bill) 형태로 표결 처리되기도 함.
- 상원과 하원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합동세출위원회(conference committee)가 조정 법안을 재상정하고 상·하원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된 합동 세출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

4	대통령 서명으로 세출입법 완료	9월 30일 기한

- 의회를 통과한 세출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법률로서 효력 발생
- 대통령은 법안에 반대하여 법률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산시키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음.

※ 회기연도 개시(매년 10월 1일) 전까지 의회에서 세출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셧다운)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는 예산연장결의(Continuing Resolution)를 의결함으로써 세출법 통과 전까지 연방 부처에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잠정) 예산을 지출하도록 함.
- 오바마정부에서 제출한 2017 회기연도 ('16.10.1 – '17.9.30) 세출법안은 법정 통과 시한을 어겨 의회는 2차례 예산연장결의를 통해 2017년 4월 28일까지 임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기한 내 통과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음.

Ⅳ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무역집행] 무역집행 권한 강화로 반덤핑 · 상계관세 피소 증가 우려

□ 상무부 예산 축소(전년대비 16%)에도 불구하고,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무역집행 권한은 강화**

○ 국제무역청의 **수출 진흥 기능은 축소**하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 기능은 확대**한다는 계획

□ 상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강화 수단으로 **▲ 상무부 자체 조사 개시권 발동 ▲ 불리한 가용정보(AFA) 활용 ▲ 특정 시장 상황(PMS) 고려를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제재 수위를 높이는 효과 발생**

① **(자체조사 개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피해기업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가 독자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법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조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조항[3]이 있으나, 관행적으로 피해기업의 제소(petition)를 우선 접수하여 조사를 개시해 옴.

② **(AFA)** 미국정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4]* 규정을 활용**하여 피조사 기업에게 **고강도의 덤핑(상계관세) 마진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국내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상무부 정보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 기준을 적용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상계관세 마진을 산정함.

③ **(PMS)** 2015년 발효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에 따라, 특정국이 제품 생산원가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수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부는 이를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규정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마진을 높게 산정**할 수 있음.

*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4월 초에 있을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특정시장상황'을 적용, 덤핑 마진을 현행 10~15%에서 36%로 상향 조정할 것을 상무부에 촉구한 바 있음.

---

3) 19 U.S.C. 1671-1677 sec 1671a(Procedures for initiating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1673a(Procedures for initiating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4) 미국 무역집행효율성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피조사 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 측 미국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정보(Adverse Facts)를 사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IT] 규제완화 및 보안 관련 수요로 연방정부 IT 시장 확대 전망

□ (규제완화) 트럼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

○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 조달청(GSA) 내에 설치된 18F*는 보다 다양한 업체로부터 개방혁신(Open Source) 제품을 구매할 전망** (Bloomberg 전문가 인용)

* 18F는 연방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IT솔루션(S/W 및 H/W 개발, 구매, 민간협력 등)을 제공하여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2014년에 설립됨.

□ (정부조달시장) 非국방 부처 예산 삭감에도 불구, **국방 분야 IT 수요는 증가하여 전체 연방 IT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기술혁신을 철저히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축소를 예정**하고 있어 **중소 기술기업의 기술혁신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

□ (사이버보안) 정책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사이버보안 강화 제시

○ **미국 내 사회기반 시설과 중요 시스템 안보를 위한** 국방부, 항공우주청(NASA), 에너지부, 법무부, 재무부 등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 확대 편성**

– 국토안보부에 **국경보안 예산이 26억 달러 추가 책정되어 국경 감시, 데이터 분석, 생체인식 관련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

3. [환경] 친환경 지원 연방 프로그램 축소, 전기 자동차 개발 지원 중단

□ (재생에너지)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중단과 기타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원 삭감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예상됨.**

○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ARPA-E) 예산 전액 삭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보증 기금 대폭 축소

– 기술 혁신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장이나, **트럼프의 전통에너지 우선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 고조**

□ (자동차) 자동차 연료 효율화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속품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개발 명목으로 2008년 이래 테슬라, 닛산, 포드 등에 250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제공해 온 에너지부의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대출 프로그램』 폐기**

○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주도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함.**

– LG화학은 2013년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미국 공장 설립 시 에너지부로부터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수혜함. LG의 제품이 들어가는 GM의 전기차(Chevy Bolt) 판매 호조에 따라 현재 공장 증설 중에 있음.

4. [의료·제약] 연구개발 자금지원 축소 및 약가 규제 움직임 가속화

□ **(연구개발비 삭감)**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된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전년 대비 18% (58억 달러) 삭감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전체 의료·제약 관련 R&D 투자에 20% 이상('16년, 323억 달러)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예산 축소로 의료·제약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

– 특히 NIH가 주도해 온 에볼라 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과 바이오테러 대처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

□ **(업계)** 트럼프의 **생명과학 기술혁신에 대한 몰이해와 약가 인하를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바이오·제약 관련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트럼프 예산안 발표 직후 바이오테크 관련 주**(NASDAQ Biotechnology Index)가 **최대 4.7%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됨.

□ **(기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약품 확대와 인허가 규제 간소화 등 의료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 미국 식약청이 바이오복제약 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전망

5. [국경보안] 국경장벽 건설 가시화, 건설기자재 수요 급등 전망

□ (국경장벽) 트럼프 예산안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립과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41억 달러를 요청함.**

○ 국토안보부는 예산안 발표 직후(3.17)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5]를 공개함.

– 국토안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3,1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과 주변 인프라 건설을 위해 3.5년 동안 최소 21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 (기회)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경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 자재 및 기타 물품 조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개방됨.**

○ **WTO 조달협정(GPA)과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미국 공공 조달 사업에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바이아메리칸 규정 면제)

– **시멘트, 철강 등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수송 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기대됨.**

6. [인프라] 교통부 예산 축소, 인프라 투자 공약 이행에 의구심 고조

□ (예산축소) 교통 인프라를 주관하는 **교통부 예산을 전년 대비 13% 삭감하여 트럼프가 당초 공약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실현에 불확실성 가중**

○ **주·지방 정부의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대표 연방 프로그램인**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를 폐기**하는 등 공약 후퇴 조짐에 따라 관련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재원) 트럼프는 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수익 유보금 반입에 대한 과세와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 유도를 제시**함.

○ 이러한 방안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여당 **공화당 의원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의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기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바, **1조 달러의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실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기업들의 지속적 관심이 요망**됨.

5) https://www.fbo.gov/index?tab=documents&tabmode=form&subtab=core&tabid=8380feb8bca4e0be6aa65de6b13cab9d

V 시사점

□ "미국우선주의", "하드파워" 예산안, 對韓 통상 압력으로 비화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전임 정부의 소프트 파워(soft-power) 외교를 폐기하고 **국방력을 앞세운 하드 파워(hard-power) 기조의 대외 정책 강력 시사**

○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을 협상 카드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 단행 가능성**

–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발표한(3.1)'**2017년 대통령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해외시장 개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영향력(leverage)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힘.

* 동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개선 사항으로 ▲ 원산지 규정 해석 ▲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 ▲ 노동환경 문제 ▲ 농산물 수입의 비관세 장벽 ▲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지적함.

□ 트럼프 정책에 따라 산업간 명암 극명하게 갈려… 분석과 대비 필요

○ 1조 6백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부처의 재량 예산은 정부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민간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바 **우리 기업과 정부의 면밀한 동향 분석과 사전 대비가 요구됨.**

○ 트럼프 예산안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 **국방·안보 강화** ▲ **불공정 무역 해소** ▲ **환경 규제완화** ▲ **시장경쟁에 기초한 산업 정책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될 전망

– 트럼프노믹스의 **승자는 군수, 자동차, 보안감시(사이버), 전통에너지, 바이오복제, 인프라 건설 업종, 패자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브랜드 제약** 등으로 분석됨.

□ 트럼프 정부, 경제 아젠다 관철을 위해 의회와의 치열한 수 싸움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 예산, 세제개혁, 인프라 재원마련은 결국 입법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對의회 관계설정은 난제**가 될 전망

–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법안이 예상치 못한 공화당 보수 강경파의 저항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좌초.** 감세와 법인세 개혁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 입법 역시 공화당 내에서조차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

2017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 시대의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	2017.1
17-002	2017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1
17-003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 통상 일정	2017.1
17-004	호주 화장품시장 현황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7.1
17-005	트럼프 취임식 발표에 따른 주요국 반응 조사	2017.1
17-006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2
17-007	미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 조사	2017.2
17-008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 여건 분석	2017.2
17-009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17.3
17-010	2017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7.3
17-011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2017.3
17-012	중동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3	CIS지역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3
17-014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2017.3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2017.1
17-00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7.3
17-003	新통상시대 중남미 주요국 다각화 정책과 시사점: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과 기회요인	2017.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사례집	2017.1
17-002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1
17-003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	2017.1

17-004	2016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7.2
17-005	2017 해외진출종합핸드북	2017.2
17-006	지사화 우수사례집	2017.3
17-007	2016 서비스업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7.3
17-008	2017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2017.3
17-009	이란 진출 종합가이드북 2017	2017.3
17-010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6	2017.3
17-011	2016 IP-DESK 백서	2017.3
17-012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투자유치 대응전략	2017.3
17-013	2016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7.3
17-01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매력도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2017.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7.1
17-002	2017 中美시장 진출확대 설명회	2017.1
17-003	이란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1
17-004	쿠바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2
17-005	(매칭페어) 제1차 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활용 상담회	2017.2
17-006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7차 수요포럼	2017.2
17-007	2017 유엔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17)	2017.2
17-008	2017 아세안 시장 진출 설명회	2017.2
17-009	2017 GBMP 보건의료 프로젝트 설명회 (Global Healthcare Project Plaza 2017)	2017.3
17-010	GBMP 2017 글로벌 공공조달 의료기기 시장진출 설명회	2017.3
17-011	케냐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2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멕시코 진출전략 세미나	2017.3
17-013	러시아 KSP 투자진출 세미나	2017.3
17-014	2017 세계 유통시장 진출 쇼케이스 전략설명회	2017.3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2016년 대중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2017.1

17-002	2017 차이나 비즈니스 트렌드	2017.2
17-003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2017.3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7-001	미국의 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및 향후전망	2017.1
17-002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7.2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정민 차장
◈ 시장조사팀 강환국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7-015

2018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4월 5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 (02-3460-7593)

ISBN : 979-11-6097-226-9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8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